



추모공원으로 이동하는 고 박원순 시장 운구행렬
결식을 마친 뒤 추모공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영결식이 끝난 후 오열하는 서울 시민들
민들이 오열하고 있다.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의 영현이 서울시장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봉송되자 시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 발의



국회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생존위협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지역업자의 납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인해 납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숨 쉴 수 없다면 무엇보다도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 지난 20년간 통폐되어 불가상충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기준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2천만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공수처 출범 '임박'

"공수처, 불가역적 흐름... 국민의 숙원"
공수처 후속 3법,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여당 몫 추천 완료
김종철 연세대 교수·장성근 전 회장 등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3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하고 미래통합당을 재차 압박했다. 7월 국회 내 공수처 설치 후속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추천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국회는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당에 부탁한다. 검찰개혁은 일부 국민이 아닌 많은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다.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검언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수처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직내부 고위공직의 수사를 맡다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불가역적 흐름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출범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통합당만 협력하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다. 통합당이 국민의 숙원을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맞추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수처설립준비단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13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이 조속히 임명돼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통합당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제1야당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며 야당에도 추천위원 선정을 촉구했다.

법안 속도전에도 돌입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뉴스1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주민들 익산시 등 상대 170억 손해소송

전북민변, 주민 등 173명 대리 소송 수행

민중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지부장 변호사 김석곤, 이하 전북민변)는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북민변은 암사망자 15명의 상속인들, 암부병중인 마을주민 15명을 포함한 173명의 소송대리를 맡아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 곧바로 소송절차에 들어가는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장점마을은 인근의 (유)금강농산에서 발생한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암이 발생한 곳이다.

폐기물중환제활용업체인 (유)금강농산은 폐사료, 연초박, 피마자막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비료를 생산했다.

하지만 연초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건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별도의 대기배출구를 만들어 배출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금강농산이 (주)KT&G

로부터 폐기물로 받은 연초박의 양은 2232톤이지만 신고하지 않은 수입산 연초박도 다량 발견돼 실제 불법적으로 사용한 연초박의 양은 더 많다고 보고했다.

또한 금강농산 사업장 바닥, 벽면 및 천장 프레임 내 침적먼지에서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인 고농도의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금강농산의 환경오염과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 등 피해와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졌다.

이는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전북민변은 그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주민들에 대한 실제배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주민들의 피해배상에 응할것을 요구했다.

박민수 변호사(장점마을 대리인 단 단장)는 "전북도, 익산시의 지난해부터 3차례 민났지만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 협의가 안돼 배상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전북도, 익산시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